

한국의 정치발전과 民軍關係

李 東 熙

(京畿工業開放大學)

〈目 次〉

- | | |
|-------------------------------------|--|
| I. 문제의 제기 | III. 한국의 정치 변동과 軍의 割役 |
| II. 현대 民軍關係의 이론적 논의
와 韓國軍의 정치 참여 | IV. 결론에 대신하여 : 韓國 民軍
의 融和 가능성은 존재하는가? |

I. 문제의 제기

전환기의 한국정치에 있어 韓國軍의 存在는 어떻게 투영되고 있으며 또한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국정신사회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Korea Political Society)를 위해 요구되는 民軍關係의 바람직한 類型은 어떻게 眺望될 수 있을 것인가? 1960년대 이후 이제까지 한국군의 정치개입이 가능했다는 사실때문에 과연 앞으로의 民軍關係 역시 불편하고도 否定的인 方向에서만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앞으로 그 經驗的 踏步에서 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상의 몇가지 질문과 더불어 제기되는 지적인 疑懼心들이 높아가는 한국국민의 민주화 요구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소되어 나갈 것인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의문들은 차후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한국정치가 自律的인 變化的 方向을 모색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

수를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까지의 민군관계와는 다른 관계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주사회에서의 軍의 存在樣式을 새롭게 암시하여 주기 때문이다. 현 단계의 한국정치 현실 속에서—— 제5공화국의 정치일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앞으로의 한국정치발전과 민군관계를 논의한다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도 시기상조적이다. 아직도 그 문제는 예측의 차원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정치 현상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미 암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 해결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실마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먼저 그 代案的 思考方向을 제시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시나 民軍關係의 합리적인 모델제공(혹은 타결책) 보다는 포괄적인 수준에서 兩者간의 새로운 존재양식과 그 관계인식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인식의 지평이 어느 범위까지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까지 넓어지고 진전될 수 있는가를 탐색해 보는데 이 논문의 主眼點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현대 민군관계에 관한 핵심적인 기존의 논의와 한국군의 정치참여에 대한 최근의 국내논의를 一瞥하고 한국의 정치변동 과정에서 군의 역할은 어떻게 位相化(Topologize)되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남은 부분의 논의로서 본고는 한국정치발전문제와 民軍의 融和가 과연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를 타진해 봄으로써 몇가지 斷想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현대 民軍關係의 이론적 논의와 韓國軍의 정치참여

1. 軍國主義와 군대의 정치 참여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 (Quis custodiet ipsos custodes)라고 고전적인 論題가 말해 주듯이 군대의 정치참여는 역사상 어떤 시기나 어떤 장소에서도 논란되어 온 문제이다. 오늘날 군의 정치권력장악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praetorianism”의 기원인 로마제국의 近衛隊 (praetorian guard)는 군에 의한 정치적 간섭의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다.¹⁾

또한 이 문제는 다소 맥락을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Platon 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그는 국가의 수호자로서 무사(군인)의 자질을 논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戰士로서의 단련을 받은 절도있고 용감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필수품을 다른 시민들로 부터 그들의 수호에 대한 보수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되 그들의 연간소요량을 초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정도로 받아야 하네.....즉 그들은 자신들의 魂안에 신들이 준 황금과 은을 언제나 지니고 있어서 인간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밖에 또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그들에게 일러 주어야 하네.....그러나 이들이 개인의 땅과 집, 그리고 돈을 지니게 될 때 그들은 수호자 대신에 가옥의 관리인으로 그리고 농부로 될 것이며, 다른 시민들의 협조자 대신에 적대적 독재자로 될 결세. 그리하여 그들은 증오를 하며 증오를 받으면서, 음모를 꾸미며 음모의 대상으로 되면서 한 명생을 보내게 될 것이니 어느 사이엔가 그들 자신도 그리고 다른 시민들도 파멸의 문턱에 바짝 다가 서있게 될 결세”²⁾

이러한 Platon의 논의는 Polis 구성원의 안녕을 지키는다는 고귀한 업

1) 이동희, 「韓國軍事制度論」(서울: 일조각, 1982), p. 64.

2) Platon, politeia(Republic), 416e~417b; 번역문은 이동희, 「정치학원론」(서울: 일신사, 1986), 개정증보판, pp. 319~320에서 재인용

무를 맡고 있는 군인이 스스로의 本分을 잊고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私利에 몰두하는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경고였다.

이와 같이 고대로부터 주요 관심대상 중 하나가 되어 온 군대의 軍事外的 事項에 대한 간섭은 상당한 논의를 자극하였지만 결정적인 충격을 준 것은 민간적인 사항과 군사적인 업무의 機能的分化(Functional differentiation)가 완전히 이룩된 近代大衆的 軍隊가 형성된 이후의 일이라 할 수 있다.³⁾

특히 군사적인 모든 사항에 대한 숭배와 찬양을 아끼지 않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풍미한 유럽의 浪漫主義 思潮와 군사적인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혐오감과 공포심을 기진 中産階級的 自由主義의 대립현상은 이 문제를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만들었다.⁴⁾ 더우기 그 대립현상이 확대되어 軍國主義的 프로이센과 自由主義的 英·佛 세력과의 대립이 야기되었고 나아가서는 제 1 차세계대전의 원인을 군국주의에 돌려 이에 대한 경계심을 낳았다.⁵⁾

여기에다가 군국주의적 침략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독일, 이태리, 일본의 3국에 의해서 주도된 제 2 차세계대전의 경험과 대전기간중 자유주의 국가들에 있어서의 군사적 요소의 우월성에 대한 경험은 민주주의체제에 있어서의 軍隊의 位置에 대한 기본문제를 숙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2 차세계대전 이후 새로이 독립된 신생국가들에 있어서나, 기왕의 독립국가중에서도 南美의 低開發國家들에 있어서 軍部에 의한 정치권력 장악의 문제는 단순히 군국주의라는 역사적

3) Stanislaw Andreski, *Military Organization and Society*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2nd, enlarged ed., p. 184.

4) Samuel P. Huntington, *The Soldier and the Stat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p. 90ff.

5) Volker R. Berghahn, *Militarism: The History of an International Debate 1861~197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Ch. II, III.

문제의식을 넘어서서 군의 정치개입의 문제가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되기에 이르렀다.⁶⁾ 즉 정치발전 또는 근대화라는 포괄적인 문제의 틀을 바탕으로 하여 그러한 현상들이 불가피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지, 또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은 어떠한 것인지 등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⁷⁾

후진국들에 있어 군대가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변동을 추진하는 進取的인 動機(Progressive motivations)는 여러가지 요소들에 의해 형성되나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전통이론가중 한 사람인 Finer는 군대집단

6) James M. Malloy, ed., *Authoritarianism and Corporatism in Latin America* (Pittsburgh, Penn.: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7). ; David Collier, ed., *The New Authoritarianism in Latin Americ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 Guillermo A. O'Donnell,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Authoritarianism: Studie, in South American Politics*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s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1979d).

7)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로서 대표적인 것들로는 주로 다음 참조 : Amos Perlmutter, *The Military and Politics in Modern Times: On Professionals, Praetorians, and Revolutionary Soldiers*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77). ; *Modern Authoritarianism: A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81), pp. 51~62. ; Eric A. Nordlinger, *Soldiers in Politics: Military Coups and Govern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77) ; V.R. Berghahn, *op. cit.*, Ch. IV. ; Robert A. Hanneman, "The Military's Role in Political Regimes," in *Armed Forces & Society*, Vol. 12, No. 1. (Fall 1985), pp. 29~51. ; Ekkart Zimmermann, *Political Violence, Crises & Revolutions: Theories & Research* (Cambridge, Mass.: Schenkman Publishing Co., 1983). ; "Toward a Causal Model of Military Coups d'etat," in *Armed Forces & Society*, Vol. 5, No. 3 (Spring 1979), pp. 387~413. ; "Coups or Military Rule, and When Both?," in *ibid.*, Vol. 7, No. 3 (Spring 1981), pp. 491~495. 국내에서 출간된 연구들로서 대표적인 것은 다음 참조 : 한배호, 정태동, 민만식, 김영문, 김용서, 박상식(공저), 「신생국정치론」(서울 : 정음사, 1983) ; (바른소리 Series ①, 제 3 세계의 군부와 정치) ; 김영명, 「제 3 세계의 군부통치와 정치경제 : 브라질, 한국, 페루. 이집트의 비교연구」(서울 : 한울, 1985) ; 아모스 펄무터(의)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회(번역), 「군부정치 : 기원, 과정, 전망」(서울 : 인간사랑, 1985) ; 박광주, "자본주의국가와 정당성 문제," 「현대사회」(겨울호/1984), 통권 제16호, pp. 194~213.

이 갖고 있는 특수한 文化的 屬性들을 기초로 하여 군대의 政治參與 動機賦與를 분석하고 있다.⁸⁾

그는 군대가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를 본래 군대집단속에서 필요한 가치체제로 강조되어 온 ‘국가의 救世主로서 군대의 명백한 使命’과 ‘군대의 국가 이익과의 一體意識’에로 결부시키는 동시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군대집단의 복합적인 동기부여——계급, 지역, 집단, 개인적 차원에서의 諸利益과 연관된 정치참여 誘引 要因들로서——를 설명하고 있다.

Finer를 위시하여 Huntington, Stein, Andreski, Janowitz, van Doorn, Casswell, Vagts, Watkins, Rapport, 및 Smith등에 이르는 1960년대까지의 一群의 이론가들⁹⁾을 통해 민군관계의 기본적 유형 (Praetorian model, Garrison-State model, Nation-in-arms system, Civil-military Juxtaposition system등)들이 제시되었음은 이미 주지하는 내용

8) Samuel E. Finer, *The Man on Horseback* (New York, N.Y.: Praeger, 1962), pp.32~60.

9) S.P. Huntington, *op. cit.*; Harold Stein, ed., *American Civil-Military Relations: A Book of Case Studies* (Birmingham, AL.: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63); A. Vagts, *A History of Militarism* (New York, N.Y.: Meridian Books, 1959), rev. ed.; Morris Janowitz, *The Military in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New State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64). ; Jacques van Doorn, “Armed Forces and Society: Patterns and Trends.” in van Doorn, ed., *Armed Forces and Society* (The Hague: Mouton, 1968), pp.39~54. ; S. Andreski, *op. cit.*; Harold Lasswell, “The Garrison State and Specialists on Violence,” i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January 1941), pp.455~468. ; “Does the Garrison State Threaten Civil Rights?,” in *Annals of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may 1951), pp.111~116. ; F.J. Watkins, “Praetorianism,” in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1934d), Vol.XII, pp.305~307. ; David Rapport, “A Comparative Theory of Military and Political Types,” in S.P. Huntington, ed., *Changing Patterns of Military Politics* (New York, N.Y.: Free Press, 1962), pp.77~96. ; Louis Smith, *American Democracy and Military Power*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53). ; Alfred Stepan, *The Military in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들이다.

그러나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에 들어와 민군관계의 연구주제는 어느 특정한 모델이나 일반이론적 수준에서 조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특히 공산정권내에서의 黨—軍—官—民 關係 研究¹⁰⁾나 B-A國家群內에서의 再民主化(Redemocratization)현상을 다루려는 최근의 입장, 그리고 제3세계 국가군내에서의 민군관계연구는 각 국가의 민·군이 갖는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더욱 自律的이고도 多元的인 이론들의 啓發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해 주었다.¹¹⁾

10) 최명 교수는 최근에 이르러 공산주의 정치체제의 민군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Huntington모델의 보편성을 의문시하여 이를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들의 노력에는 적지않은 한계점들이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공에 있어서 당과 군의 관계 : 민군관계의 공산권 모델에 관한 일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17집(1983), pp. 261~278. 특히 그의 논문중 주) 13에 유념할 것(p. 263).

11) 제3세계의 사회주의 혁명과 militarism 문제와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한 최근의 탁월한 연구로는 다음 참조: Miles D. Wolpin, *Militarism and Social Revolution in the Third World* (Totowa, N.J.: Allanheld, Osmun & Co., 1981), Ch. 2, 3, 4. 또한 B-A 국가군 간에서의 민군관계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업적들로는 다음 참조: V.R. Berghahn, *op. cit.*, Ch. IV.; Daniel Zirker, “Civilization and Authoritarian Nationalism in Brazil: Ideological Opposition Within a Military Dictatorship,” in *Journal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Vol. 14, No. 2 (Fall 1986), pp. 263~286.; John Markoff & Silvio R. Duncan Baretta, “What We Don’t Know About the Coups: Observation on Recent South American Politics,” *Armed Forces & Society*, Vol. 12, No. 2 (Winter 1986), pp. 207~235.; Wilfred A. Bacchus, “Development Under Military Rule: Factionalism in Brazil,” in *ibid.*, Vol. 12, No. 3 (Spring 1986), pp. 401~418.; Virgilio R. Beltran, “Political Transition in Argentina: 1982 to 1985,” in *ibid.*, Vol. 13, No. 2 (Winter 1987), pp. 215~233.; Merilee S. Grindle, “Civil-Military Relations and Budgetary Politics in Latin America,” in *ibid.*, pp. 255~275.; Dan Horowitz, “Strategic Limitations of ‘A Nation in Arms’,” in *ibid.*, pp. 277~294.; Stanley E. Hilton, “The Brazilian Military: Changing Strategic Perceptions and the Question of Mission,” in *ibid.*, Vol. 13 (Spring 1987), pp. 329~351.; Stephen L. Mangum & David E. Ball, “Military Skill Training: Some Evidence of Transferability,” in *ibid.*, pp. 425~441.; Guillermo A. O’Donnell, Philippe C. Schmitter & Laurence Whitehead,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ule: Comparative Perspect-*

남미 군사정권의 민주화를 논의한 이들 대부분의 최근 연구에서는 주로 군사정권의 퇴각이후 변모하는 민간정부의 政策的 對應과 이에 따른 정치·경제적 변동양상을 주의깊게 분석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등 민정이양된 B-A국가들에서 앞으로의 민군관계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비록 민주화되어 가고는 있다 하더라도 이들 국가가 과연 과거 군사정권의 官僚的 權威主義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재현하지 않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율과 다원적으로 분출되는 사회 제 부문의 민주화 요구에 대하여 組合主義的 統制方式 등을 여하히 완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이들이 경험한 최근의 정치변동 사례가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文民化(Civilianization)와 民衆의 政治的 勝利로 평가될 것인가, 아니면 군부의 단순한 戰略的 後退(strategic retreat)로서—외견상 市民的 抵抗에 대한 잠정적 대응으로 단행된 불가피한 결과로 해석될 것인가 하는 二重的 餘韻 역시 분명히 가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政況展開 여부에 따라 이들 국가의 再民主化 문제는 보다 분명한 평가대상이 될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 그만큼 再軍部化(remilitarization)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리라 예측된다.

이들의 경험적 사례가 1980년대 후반의 한국정치사회의 변동에 대

ives (Baltimore, Maryl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 Robert E. Looney & P.C. Frederiksen, "Consequences of Military and Civilian Rule in Argentina: An Analysis of Central Government," i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20, No. 1 (April 1987), pp. 34~46. ; Mark Rabine, "Guatemala: Redemocratization or Civilian Counterinsurgency?," in *Contemporary Marxism*, No. 14 (Fall 1986), pp. 59~64.

해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그리 단순히 규명될 수는 없으나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교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2. 한국군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치학적 논의

제 2 공화국의 붕괴되고 5·16에 의한 새로운 정치의 장이 개막된 이래 지난 26년간 한국군부의 정치개입 문제는 현대한국정치연구에 있어 중요한 관심대상으로 부각되어 왔다. 아직도 “現在로서의 歷史性”을 강하게 갖고 있는 3·4공화국 정치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석한다는 문제는 자칫 성급한 가치판단에서 유래하는 유형무형의 오류를 낳길 수 있으나 그간 한국정치연구 과정에서 논의된 韓國軍部の 政治介入 문제는 술한 논쟁의 흔적을 보여왔다.¹²⁾ 지면관계상 그간의 논의를 상세히 재분석해 볼 수 있는 여유는 없으나 주로 이에 관한 논의는 “한국군부의 정치참여 이후의 민—군관계”라는 相對論的 視角에서 보다는 군부의 개입 그 자체가 갖는 政治的 正統性의 適實性 與否 그리고 경제발전을 목표로 추진되어 온 結果論的 功過와 정치발전 문제와의 함수관계 규명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그간의 연구 경향을 민군관계라는 포괄적인 문제로 다루기는 힘들었다. 그보다는 군에 대한 민의 태도와 입장이라는 부분적인 시각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킨 시도가 있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양자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거나 객관할 수 없게 만들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 “국가”를—국가의 상대적·절대적 자율성 (relativeabsolute autonomy) 개념으로—새로운 분석단위로 강조하는 정치이론이 등장함에 따라서 국내학계에서도 3·4공화국의 박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한국의 국가성격을 규명하고 경제발전정책의 허실을 타

12) 현대 한국정치연구과정에서 이에 관한 기존의 국내의 논의를 문헌중심으로 집약한 문헌 결과로는 다음 참조: 김학준, 「한국정치론: 연구의 현황과 방향」(서울: 한길사, 1983), 제14장; 박종성, “현대한국정치 연구의 경향과 방법: 근대화의 정치발전, 정치변동론과 그 이후의 논의,” 청구사범대학, 「논문집」, 제19집(1987. 4), pp. 115~137.

진하려는 술한 학문적 논의가 진행되었다.¹³⁾ 이들 논의의 저변에는 정치발전과 근대화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이제까지의 “Anglo-American ethnocentrism”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최근의 發展論議를¹⁴⁾ 목시적으로 동의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또한 남미군사정권의 구체적 경험과 한반도 분단의 특수성을 별다른 비교, 여과장치 없이 그냥 수용해 버림으로써 군부의 정치개입⇒“관료적 권위주의정권의 장기화”(산업화·공업화의 심화)⇒“정통성의 상실”⇒“정통성을 위한 위기해소의 노력”⇒민중의 정치적 배제⇒조합주의적 통제의 강화⇒反民主化라는 일련의 등식을 무리없이 설정, 일반화 하려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러한 논의는 바로 군부정치의 등장 자체가 “불가피한 권위주의화”(inevitable authoritarianization)경향을 초래한다고 인식함으로써 軍部の 등장을 애초부터 反民主的이고도 權威主義的인¹⁵⁾ 현상으로 評價切下시키

13) 그간에 진행된 3.4공화국 정치분석 도구로서 빈번하게 인용된 서구의 이론들로서는 G.A. O'Donnell의 관료적 권위주의국가론과 H. Alavi의 과대성장국가론 그리고 1960년대말 이후 남미에서 등장한 반발전문적 견해로서 다양한 유형의 이론 및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 입각한 한국사회 분석론 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쟁과정에서 등장했던 국내학자들로서는 강민, 한상진, 최장집, 임현진, 김성국, 박광주, 이정복, 김진균, 박상섭 등을 들 수 있고 최근 이들의 논쟁은 군사정권의 반민주성이 공업화의 심화라는 명분 속에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는 O'Donnell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이 이론의 적실성을 옹호하는 측과 군사정권의 장기화 경향은 공업화의 심화보다는 오히려 군 최고 수뇌부의 개인적 권력욕과 의도적인 구상결과 가능하다고 이에 맞서는 측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국면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일례로서 강민 교수는 한 논문에서 관료적 권위주의론에 입각한 자신의 입장을 “경제결정론적 시각”이라고 비판하는 박광주, 이정복, 양교수의 지적에 대해 그러한 비판적 지적 자체가 또 다시 “정치결정론적 오류”를 범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가이론의 한국적 적실성 :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이론의 극복을 위하여,” 한국정치학회(편), 최상룡(외)공저, 「현대 한국정치와 국가」(서울 : 법문사, 1986), pp. 151~185 참조.

14) Howard J. Wiarda, “Toward A Nonethnocentric Theory of Development: Alternative Conceptions from the Third World,” in H.J. Wiarda, ed., *New Directions in Comparative Politics*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85), pp. 127~150. ; Richard A. Higgott, *Political Development Theory: The Contemporary Debate* (London: Croom Helm, 1983), Ch. 1, 2.

게 되는데 이바지 하였고 이는 당연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민군관계를 의식케 만드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서 볼 때 군부통치에 대한 평가절하적 해석은 주로 경제발전의 결과적 측면보다는 그로 인한 政治發展의 退步와 正統性不在라는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부의 분배수준의 상대적 상승에 따라 민주화 요구의 열기는 이제 군부퇴진만이 가장 중요한 문제해결의 첩경인 것 처럼 진단케하는 비판적 상황을 조성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적이고도 부정적인 분석의 Tone은 최근에 발표된 박상섭교수의 한 反省의 論文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교수는 군부의 등장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개적 도전이 갖는 의미를 분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실제에 있어 군부 쿠데타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말을 바꾸어 군부의 정치개입은 일시적이라는 조건에서만 수락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文民統治라는 자유주의적 관

15) 군부의 등장과 권위주의화 경향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주로 다음 참조 : Vicky Randall & Robin Theobald, *Political Change and Underdevelopment: A Critical Introduction to Third World Politics* (London: MacMillan, 1985), Ch. 3, 4. ; Clive Y. Thomas, *The Rise of the Authoritarian State in Peripheral Societies* (New York, N.Y.: Monthly Review Press, 1984). ; Reginald J. Harrison, *Pluralism and Corporatism: The Political Evolution of Modern Democraci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0), Ch. 4. ; Arturo Valenzuela, *The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s: CHILE*, ed. by Juan J. Linz & Alfred Stepan (Baltimore, Maryl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8), Ch. 4.

한승주 교수는 5·16 이후의 군사정권기를 ‘권위주의’의 terminology 하에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 군사통치권위주의(Military-ruled authoritarian : 1961~1963)
2. 준 권위주의(Semi-authoritarian: 1964~1971)
3. 재 권위주의화(re-authoritarianization : 1972~) 한교수는 이 3단계를 관료적 권위주의기로 해석하고 있다 : Sungjoo Han, "Power, Dependency, and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1977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p. 28.

넘어 지식인, 언론인 등의 특수집단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一般人の 관념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정상적인 憲政秩序에 대한 요구는 군사정권에 대해 정당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군사통사통치자들이 擬似民主主義방법, 즉 국민투표를 통해 民間人 政府로서 모습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의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정당성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政治文脈에서는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문민통치로서 자신을 가장하는데 덧붙여 군사정부는 점차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원리를 근대화의 구호 등에서 잘 예시되는 바와 같은 行政的 효과성의의 주제를 대체시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고자 노력하였다. 동시에 “民族的 民主主義”의 개념을 제시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재정의의 시도하기도 하였다. 결론론적으로 볼때, 이 “민족적 민주주의”가 뒤에 維新的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음은 자연스러운 사태의 진전으로 보이기도 한다.

효과성(efficacy)의 개념에 대한 강조는 경제·정치 양면에서 동시에 구체화 되었다. 일반 국민의 복지요구를 충족시키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정부 주도하의 산업화정책을 통한 급속한 경제발전정장이 그 하나였고 각종 개발 정책들을 조정하고 집행할 국가기구들의 확장이 그 다른 하나였다. 이 후자속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활동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한 정통성의 부족을 보충할 목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여겨지는 억압기구들의 수적 증가와 질적 강화등이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승만 정부의 기본적 딜레마는 자유주의적 정치의 이상과 현실사이의 괴리 였었다. 한편 제 2 공화국하의 정치적 실험이 남긴 교훈은 이상에 대한 맹목적 추구는 허망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현실주의적인 제 3 공화국하에서의 새로운 정치적 실험도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없지 않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정치적 정통성의 새로운 기반을 창출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새로운 정당성의 필요성을

창출하게 되었다. 통치의 대상으로서의 시민 사회의 성장과 경제의 확대를 능가하는 국가기구의 성장으로 인해 새로운 정부는 항구적인 정통성의 결핍 상태를 겪어야 했다. 결국 국가기구의 확대는 정치의 안정보다는 오히려 불안정에 기여한 면이 더욱 컸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그렇다면 이제 이상과 같은 시각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民軍關係의 인식방법모색을 위해 변동기의 한국정치 상황에서 요구되는 군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며 또한 그 관계인식은 어떤 방향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로 한다.

Ⅲ. 한국의 정치변동과 軍의 役割

1. 정치적 민주화 요구와 한국 정치체제의 능력

해방이후 42년간의 한국 정치를 一瞥해 볼 때 정치는 아직도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고 정치 변동은 주로 暴力的 契機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 이유로서 우리는 한국이 그 동안 지속적인 위기를 경험했으며 수많은 환경적 제약변수들이 입헌정치의 발전을 지연시킨 결과 한국 정치는 여전히 정치엘리트간의 파벌주의를 초월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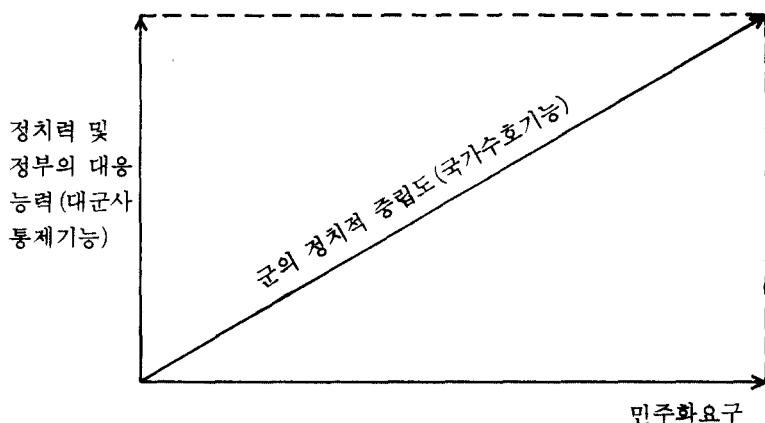
안병준 교수는 지금까지의 한국정치에 지속적인 위기가 작용한 결과 폭력적인 정치변동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헌정과 군정이 교체되는 가운데 참여, 권위 및 정통성의 위기가 동시에 중층복되어 헌정시도—장기집권—반체제도전—군정—신체제시도의 주기(cycle)를 반복해 왔다고 주장한다.¹⁷⁾

16) 박상섭, “한국정치와 자유민주주의 : 현대한국 정치사의 정치사회학적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정치학회(편), 최상룡(외)공저, 앞의 책, pp. 423~424 ; 이와 관련된 주제로서 다음 논문 참조 : 김영명, “한국의 정치변동과 유신체제,” 앞의 책, pp. 377~408.

이러한 일련의 배경 속에서 등장한 제 5공화국은 공화국 초기에 새로이 구성했던 헌법을 이제 또 다시 개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1987년 6월 이후 漸高해 가는 민주화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시점에 처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행 선거제도와 정당정치는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군은 한국정치에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지 등을 비롯한 숱한 문제가 그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관한 예측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 난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을 추상적으로 단순화시켜 말한다면 그 해결의 방향은 민주화 요구의 강도와 범위, 그리고 정치력과 한국 정부의 능력크기라는 사실속에서 결정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흔히 거론 되어 온 군부의 거취 여부문제 역시 이 兩軸 사이에서 빚어지고 힘의 함수관계에 따라 그 본연의 기능—國家守護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복귀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다. 한국 군부의 정치개입이 가져다 준 결정적 기여와 한계는 과연 무엇이며, 소위 “민간인복을 입은 군인”(Soldiers in mufti)이 집권했던 지난 한국 정치사의 결과론적이고도 종합적인 평가(혹은 해석)는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 역시 현 단계에서는 실로 어려운 문제이다. 그 어려움만큼이나 단순하게 배제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현 단계에서 군부의 즉시적 퇴진만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최상의 지름길을 과연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될 때 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문제는 군부의 즉시적 퇴진여부나 그 시한에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군부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고 자체기능으로 복귀할 수 있는 민군관계의—정치/사회심리적 무드의—조성과 민주화 요구에 대한 현실정치력 및 정부의 대응능력강화에 있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Vector해석적으로 설명하려 한다면 다음 도표처

17) 안병준, 「한국의 정치와 정책 : 이론과 실제」(서울 : 전예원, 1986), p. 119.



〈도표〉 민주화 요구, 정치력·정부의 대응능력 및 군의 정치적 중립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Vector해석

럼에서 될 수 있을 것이다.¹⁸⁾

다소 다른 맥락에서의 논의이긴 하나 이와 관련된 주제로서 한국의 국가적 성격을 “Praetorian model”과 “Mercantilism”이라는 양자의 합성적 측면에서 접근, 분석하려는 박광주 교수의 주장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박교수 역시 앞으로의 한국의 정치 현실은 사회경제적 구조변화가 가져온 민주화 요구라는 힘과 정치권력의 관성에서 나오는 현상유지 요구라는 또 다른 힘의 합성결과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박교수 자신의 입장을 들어 보기로 하자.

“.....한국의 집정관주의적 신증상주의국가는 어떤 민주화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산업화로 인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서 나오는 구조적 결정요인과 ‘제도 창설자’들의 自願論의 결정요인이 어떻게 어우러지느냐에

18) 이러한 예시적 발상은 어디까지나 이념형적 수준에서 착안될 수 있을 뿐, 실제정치 현실에서 이 3자간의 힘의 관계가 어떻게 위상화 될 것인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또한 Vector라는 개념이 일정한 방향과 힘의 크기를 전제한다는 점에 유념할 때 군의 정치적 중립도와 그 향방역시 X축과 Y축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것은 달려 있다. 만일 그들이 민주화 요구의 추세에 잘 적응하면서 따르는 것이 ‘분별력있는’(prudent)일이라고 믿는다면 사회·경제구조의 변화가 보여주는 민주화로의 경향성은 순조롭게 발전할 것이지만, 그들이 이 경향성을 지연시키거나 역행하려고 할 때에는 정치적 혼란과 폭력은 그만큼 증대될 것임에 틀림없다. ……여기에서 민주화를 향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라는 경향성(tendency)과 현상유지라는 정치권력의 속성이 서로 길항적으로 마주치면서 빚어내는 갈등적 긴장은 더욱 증대되리라는 현실진단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민주화 요구가 정치제도속에 정착되는 여부도 이 두 길항적 힘간의 상호작용 모습에 달려있다는 전망을 할 수 있게 된다.”¹⁹⁾

집권층 스스로가 정치체제의 ‘평화적 변동’(peaceful change)을 다짐하고 野圈을 위시한 정치적 반대세력들이 그에 대한 신중한 포석을 준비하는 현 단계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박 교수가 주장하는 ‘정치권력의 관성’이나 그로부터 도출되는 ‘현상유지요구’가 어떻게 변모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그의 이 개념은 필자가 유념코자 하는 정치력, 혹은 정부의 민주적 대응능력강화라는 방향으로—발전적으로—승화되거나 원만한 민군관계의 조성을 위해 관련되는 중요한 현재적 개념이라고 파악된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개념은 이제까지의 한국 민군관계에 투영되어 왔던 부정적이고도 비관적인 이미지들을 앞으로도 당연시하게 하거나 군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게 만드는 함축성 또한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할 수 있다.

2. 한국의 민군관계와 정치발전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民軍關係는 어떠한 유형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는가?

한국의 민군관계를 부정적이고도 비관적인 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한 이론적 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으나 그 구체적이고도 경험적인 계기를 논한다면 5·16이후의 초기개입기간 보다는 주로

19) 박광주, “집정관주의적 신중상주의국가론 : 권위주의국가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정치학회(편), 최상룡(외)공저, 앞의 책, pp. 217, 219.

10월 維新이라는 하나의 모티브를 전후하여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0월 유신의 단행배경에 관해서는 아직 정치이론화될 수 있는 단계까지 규명되지 않고 있으나 여하튼 군부의 지속적인 집권을 보장하는 명분으로서 ‘안보’ 개념이 채택되고 소위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라는 예상적 위기변수가 권위주의적 리더쉽의 행사와 반정치적 경제제일주의를 확장, 적용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음은 분명하다 ‘중단없는 정진’과 ‘능률과 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조국군대화’를 위한 끊임없는 증산과 수출, 건설 등만이 이러한 북으로부터의 위기를 극복케 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신단행 이후 7년간의 정치일정은 권위주의의 강화와 조합주의적 통제의 지속이라는 환경속에서 민으로 하여금 군을 경계하고 의심케 하는 경험적 기반을 조성하였고 이로써 5·16직후의 諸改革의 結果들마저 평가절하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그 이후 오늘의 정치 상황에 이르기 까지 군부에 대한 민의 이미지는 초기의 긍정론이 捨象되거나 대폭 배제된 측면에서 형성되게 되었고 특히 ‘북의 존재와 국가안보’라는 불변의 위기변수마저 위기보다는 정권연장의 Big Card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을 조성케 되었다.

이러한 상황논리속에서 현재로서의 민군관계를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연장전선상에서 계속 인식케 하는 몇가지 이유들을 객관해 본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미 언급한 것 처럼 군부는 계속 국가안보를 제 1의 국가목표로 설정할 것이며 민은 이러한 목표설정자체를 계속 만성적 카드—제집권을 위한—로 인지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둘째로 군부가 확보한 기득권 보호와 그 확장을 위하여 계속 집권하게 되리라는 예상과 그로써 ‘민간인복을 입은 군인’의 등장은 지속될 것이라는 의혹을 버리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셋째로 비록 완전한 ‘문민화(civilianization)’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신집권층은 퇴진한 군부의 확고부동한 충성과 정치적 중립의지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 등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역시 —survey

research에 의한 구체적·경험적 연구결과가 아닌— 하나의 斷想的 見解이나 이 세가지 의혹과 감정적 불안요인들은 民軍의 통합을 깊이 저해하는 심리적 독립 변수를 구성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그리고 현재로서의— 이러한 의구심과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하더라도 그간의 비관적 民軍關係 변수가 앞으로의 관계유지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와같이 지속되리라는 충분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5·16이후 10월유신이라는 계기와 10·26, 5·17, 6·10, 6·29등 일련의 계기적 사태를 통해 국민의 민주적 기대 상승과 가치실현을 향한 참여욕구의 분출(upward mobility)이 가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10·26이라는 돌발사태에서부터 갑자기 충원된 제5공화국의 정치 엘리트의 성분이 유신체제의 군출신 엘리트와는 그 교육배경, 충원배경에서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다. 그들은 1950년대에 새로 창설한 4년제 육사 출신들이다. 사회가 혼란하고 일반대학 교육제도가 정상화 되지 않았던 전쟁시기에 미국식 고등교육과 민주주의의 이념과 훈련을 철저히 배운 장교들이다. 그리하여 5·16이래 18년 동안 제4공화국의 정치엔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던 장교단이다. 비교적 직업의식이 강했던 교육을 받은 군인이기 때문에 장차 군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할 수 있는 집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화 요구에 대한 실천과 점진적 정치발전을 위해, 그리고 국가수호라는 목적의 공동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민군의 관계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해 ‘민·군의 융화’²⁰⁾(Civil-Military Fusion) 관계실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난제들 —정치지도자간의 반목 해소나 파벌주의 타파, 그리고 권위주의의식의 배제등— 이 실로 무수하다 하더라도 이미 논의한 민군간의 불화나 질서관계가 초극되지 않는 한 그 발전은 불완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 이때 융화(Fusion)라는 개념은 통합(integration)이나 相合(congruence) 혹은 합동(coalescence) 등의 제의미를 포괄하거나 이를 전체론적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파악해도 무방할 것이다.

안보상의 위기변수 —이미 stereo-typed된 변수라 하더라도—가 엄존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의 경우 군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것은 또 다른 위협을 자초할 수 있으며 그 동안의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민간정치인들의 불만, 혹은 부정적 의식으로 인해 民軍關係의 지속적인 불협화음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정치발전은 그만큼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문제의 핵심을 정리한다면, 발전적인 民軍關係의 유형은 民軍 상호간의 융화관계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정치력과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민주적 대응능력(democratic responsive capacity)을 강화시켜야 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속에서 민주화 요구과정에 나타나는 사회주의적 tone이 가일층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점은 문민화를 시도하는 모든 사회 제세력이 극복·흡수해 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이기도 하다. 民軍이 서로 융화되어 상호 객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위기와 충격을 흡수·조절함으로써 이를 대내외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때,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과 객관적인 對軍統制能力이 강화되어 정부와 기존의 정치력이 이를 합리적으로 연계시켜 나갈 때 한국의 정치발전은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다.²¹⁾

21) 민군관계의 융화와 상호통합을 위해 객관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비교연구를 제기한 최근의 학자로는 Sussex대학의 Robin Luckham을 들 수 있다. Luckham은 민군관계의 多國家間 비교 분석을 통해 몇가지 typology들을 재구성하여 Finer 이후 제기된 전통적 연구의 결함을 극복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에서 Luckham은 Civil-Military Relation에 투영되는 힘의 수준과 양 세력간의 境界관계가 어떻게 유지, 운영되고 있는가에 따라 10개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한국의 민군관계가 융화의 유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데 규범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동의 한다면 그것은 a의 유형으로 접근해 가야 하리라 본다. (Luckham의 비교유형론에 관한 집약적 연구 결과는 다음 도표 참조): Robin Luckham, "A Comparative Typology of Civil-Military Relations," in *Government and Opposition*, Vol. 6(1971), pp. 5~35. 도표는 다음에서 재인용: V.R. Berghahn, *op. cit.*, p. 69.

Civil Power	Military Power	Boundaries		
		Integral	Fragmented	Permeated
High	High	^{a)} Objective Control	^{e)} Apparat Control	^{f)} Subjective Control
	Medium	^{b)} Constabulary Control	^{d)} Nation-in-Arms	
	Low		^{e)} Revolutionary Nation-in-Arms	
Not High	High	^{a)} Garrison State		
	Medium	^{b)} Guardian State ^{d)} Post-Colonial Guardian State		
	Low	^{d)} Political Vacuum		

a)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b) E.g. present-day Japan, Ireland, Sweden.

c) E.g. USSR, Nazi Germany, Fascist Italy, China, Yugoslavia.

d) E.g. Israel.

e) E.g. Cuba, Vietnam, Algeria.

f) Traditional societies of Africa or eighteenth-century Europe

g) Very similar to Lasswell's original conception.

h) E.g. Egypt in 1962, Ghana in 1966.

i) E.g. Mal 1968.

j) Congo prior to Mobutu.

이 연구에서 Huntington 이론에 관한 Luckham의 다음 분석은 매우 의미있는 바 한국민군관계의 용화필요성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객관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ibid.*, p.78 :

".....Armies thus assume the role of 'door-keepers' in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a praetorian society'. Having opened the gates to the middle-class, they now act to lock it on the lower class. Seen in historical perspective, 'the radical phase of a praetorian society' begins with a bright modernizing military coup toppling the oligarchy and heralding the emergence of enlightenment into politics. It ends in a succession of frustrating and unwholesome rearguard efforts to block the lower classes from scaling the heights of political power. 'During the phase of mass praetorianism' coups therefore gain the function of 'veto interventions' which take place either when the military wish to block 'the actual or prospective victory at the polls of a party or movemnet' which they dislike and wish to see excluded from political power or when 'a government in power begins to promote radical

IV. 결론에 대신하여 : 韓國民軍의 融和가능성은 존재하는가 ?

이제까지 본 연구는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民軍關係는 어떻게 모색될 수 있으며 인식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몇가지 논의를 진행해 왔다. 현 단계의 한국정치현실 속에서 과연 民軍의 용화가 실현될 수 있는 경험적 기반이나 그 구체적 방법이 발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우리 모두는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 다만 이를 위한 필수적 전제로서 요청되는 사항들에 관해 계속 진지한 사유와 모색을 포기할 수 없는 것²²⁾이 현재 우리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²²⁾

고대 Rome의 병법가 Vegetius의 주장처럼 “그대 진정 평화를 회구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om, para bellum!)는 말은 한반도의 기류를 의식할 때 예외가 될 수 없고 또한 군의 정치개입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를 군 스스로가 반성할 수 있다면 방위의 필요성과 정치개입의 명분은 상호모순되기도, 합치되기도 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民軍이 용화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군이 민을 의심하거나 민이 군을 경계하고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나간 한국

policies or to develop an appeal to groups' which are politically unacceptable to the military. It is these developments during the transition from radical to mass praetorianism which inspire Huntington's pessimism concerning the continued viability of these societies.....”.

22)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사회복지 및 국가보위에 관한 제 요구에 대해 군사적 부담이 갖는 경험적 의미를 규명한 연구로서 다음 참조 : William J. Dixon & Bruce E. Moon, “The Military Burden and Basic Human Needs,” in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0, No. 4 (December 1986), pp. 660~684.

정치사에 얼룩진 환멸과 실망의 흔적이 보복과 한풀이의 정치형태로 더욱 초라하게 비쳐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민과 군의 관계도 복수와 도전의 승부관계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民軍이 실질적으로 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과연 존재하고 있는가? 필자는 적어도 우리에게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낙관하는 태도가 배양될 수 있으며 용화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異見이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民軍이란 본래 부터 한 몸인 바 군도 곧 민이요, 민도 군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우리 모두가 지난 역사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나라의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시대에 있어서 민주시민으로 기능이 달랐을 뿐이다.

현대한국정치사의 와중속에서는 이러한 과거의 국난극복과정이 하나의 낭단주의적 민족주의의 발상으로 배제되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크겠으나 민군의 일체성(identity)을 부인하거나 양자간의 용화를 거부할 이유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다. 우리민족의 최대의 시련인 한국전쟁은 바로 민이 군복을 입고 싸운 것이고, 그 사회적 동원(Social Mobility)을 시작으로 하여 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민과 군의 서로의 일체성(identity)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하는 풍토가 중요한 것이다.

이제 民軍의 실질적인 용화를 위해 경험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방법론은 과연 무엇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이 문제의 규명은 단순히 民軍이 용화되어야 한다는 본 연구에서의 斷想的 規範論의 수준을 훨씬 上位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을 향한 하나의 예비적 고찰에 지나지 않는다.